

## 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3년 9월 4일(수) 조간
담당자	황수경 KDI 서비스경제연구T/F팀장 (02-958-4107, skhwang@kdi.re.kr)
배포일시	2013년 9월 3일(화) 09:3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2-958-4030, press@kdi.re.kr)

# KDI, 서비스경제브리프 창간

□ KDI는 서비스업 관련 기존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체계적인 지표를 생산하고 시의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실증적 연구 및 합리적 정책결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간 「서비스경제브리프」를 창간

○ 3, 6, 9, 12월 첫 주에 발간 예정인 「서비스경제브리프」는 전문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는 물론, 광범위한 비전문가 독자층이 서비스업 동향 및 주요 현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

○ 구성

- 이슈분석: 시의성 있는 정책현안 및 이슈에 관한 심층 분석
- 통계플러스: 통계를 이용한 서비스경제 단면 집중 조명
- 서비스산업동향: 서비스업 분기별 동향 분석
- 정책동향: 서비스업 관련 제도 및 정책 소개

\* 향후 정책현안의 핵심에 관한 공론의 장이 될 '포커스/특집', KDI 서비스경제연구T/F에서 준비 중인 「서비스사업체 패널조사」의 분석결과를 소개하는 '패널연구' 등의 섹션을 기획 중임.

## 창조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

황수경 KDI 연구위원

□ 본 연구는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경제와 창조산업\* 중심의 창조경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, 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.

\* 창조산업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산업으로, 주로 문화산업, 콘텐츠산업 등의 서비스 부문을 지칭

□ 창조경제는 과거의 혁신형 경제 혹은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 하의 성장전략이 가져온 부작용, 즉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임.

○ 지식기반 경제에서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비지식근로자의 일자리 및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야기

-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시작된 창조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의 심화, 이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, 각광 받음.

○ 창조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가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경제 혹은 지식경제와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은 아래와 같음.

- 창조산업에서 노동은 기계에 의해 대체되기 어려워 창조산업은 본질적으로 고용친화적이라 할 수 있음.

- 창조산업의 핵심생산수단인 상상력과 창의성은 소수에 의해 독점될 수 없어 가치실현의 기회가 공평함.

- 창조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, 결국 창조산업의 시장은 소득분배를 전제로만 확대될 수 있음.

□ 창조경제 → 일자리 창출 → 국민행복으로의 연결이 가능키 위해서는 창조산업의 고유한 특성, 즉 고용창출 잠재력과 소득분배 기능에 주목할 필요

- 2008~12년 중 고용탄성치가 높았던 업종은 사업서비스, 보건 및 사회복지, 방송·영화·정보서비스, 그리고 제조업 중 일반기계, 정밀기기 분야임(p.16 [표 3] 참조).

- 대체로 R&D가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나 공정 개발에 집중되지 않고 노동에 체화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분야

- 반대로 전기전자기기, 운송장비, 통신업 등은 매우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을 나타냄.

- 서비스 부문에서는 고숙련, 중숙련, 저숙련 업종에서 고르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가운데, 특히 출판, 전문서비스, 연구개발, 영상·오디오, 방송 등 창조산업에서 고학력 일자리가 증가(p.18 [그림 2] 참조)

- 대표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각광 받은 컴퓨터프로그래밍·시스템관리, 정보서비스, 통신업 등에서는 고용이 크게 위축

- 창조산업은 창출된 부가가치의 53.5%가 노동에 배분되는 노동친화적인 가치배분구조를 가짐(p.19 [표 4] 참조).

- 근로자 보수수준도 여타 산업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.

- 창조산업에서 가치를 생성하는 방식, 즉 필요한 숙련(skill)이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과정은 경제의 제반 영역에서 창의적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
  - 창조산업에서 ‘창작→제작→유통→소비’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여러 형태의 창의성과 소프트혁신이 개입되는 방식을 경제 전 영역에 적용, 확산시킬 필요
  - 가치실현의 핵심은 창의적 산출물이 얼마나 독창적인가, 얼마나 선도적인가가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전환이 요구됨.

## [이슈분석 2]

# 창조서비스업의 산업특성 및 산업연관관계 부가가치와 고용을 중심으로

황수경 KDI 연구위원 · 김승주 KDI 전문연구원

□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, 창조서비스업\*의 산업특성을 살펴보고, 부가가치창출효과 등 산업연관관계를 분석함.

\* 창조서비스업은 방송, 연구활동, 사업서비스, 교육, 문화·오락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

□ 2011년 창조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비중 13.8%, 고용비중 14.4%로, 각각 제조업의 절반 및 80% 수준

○ 지난 10여 년간 창조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중(2000년 10.6% → 2011년 13.8%)과 고용비중(2000년 10.8% → 2011년 14.4%) 모두 확대

○ 창조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제조업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.

- 다만, 제조업의 경우 빠르게 증가한 노동생산성의 대가로 고용이 감소

□ 창조서비스업 산출물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수출비중은 낮게 나타나 주로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.

○ 창조서비스업 산출물의 50.6%가 국내에서 소비(소비+투자)되고 4.3%만이 수출됨.

- 제조업 수출비중(27.4%)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

○ 창조서비스업의 중간수요율은 45.1%이며, 이중 절반 정도인 20.3%가 제조업에 투입되는 구조

- 제조업 중간수요율은 58.9%이며, 대부분(45.8%)이 제조업에 재투입

□ 창조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1년 0.888로, 기타 서비스업 (0.823)과 제조업(0.536)보다 높게 나타남.

○ 2000년대 들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모든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낮아 지는 추세이며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 큰 폭의 감소를 보임.

○ 그러나 수입원자재 투입비율이 낮고 부가가치율이 높은 특성을 반영 하듯 창조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음.

□ 창조서비스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생산액 기준으로는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,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.

○ 감응도계수\* 및 영향력계수\*\*가 전 산업 평균값을 상회하는 창조서비스업은 부가가치유발에 의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에 해당

\*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증가했을 때 해당 산업이 받는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

\*\* 영향력계수는 해당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전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

○ 또한 전방연관효과(1.118)보다는 후방연관효과(1.166)가 더 커, 타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.

- 2000~11년 분석기간 중 창조서비스업의 영향력 및 감응도 계수는 모두 높아져 전후방 연관효과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(p.36 [그림 3] 참조).
- 창조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 당 15.8명으로 기타 서비스업(15.9명)과 유사하나, 피용자에 한정된 고용유발계수는 13.4명으로 기타 서비스업(10.9명)에 비해 높은 수준
- 창조서비스업이 임금근로자의 고용창출에 가장 효과적임을 의미
- 2000~11년 분석기간 중 전 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, 창조서비스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상대적으로 완만히 감소

## 유통산업정책의 과제

### 사업조정적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중심으로

이재형 KDI 전문위원

- 본 연구는 유통산업의 현황과 특징, 유통정책에 관한 선진국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통산업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.
  -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사업조정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유통정책을 평가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
- 우리나라에서 유통업(도·소매업) 부문의 부가가치는 2011년 현재 GDP의 7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1970년대 초 16%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
  - 1980년대 후반부터 현대적 유통산업이 급속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적 비중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유통산업의 생산(국민계정상의 총산출)이 유통마진(실물생산 측면에서는 비용에 해당)을 의미해 효율성 향상을 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왔기 때문
- 유통산업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의 재화 이동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규모가 제한적
  - 이러한 특성으로 유통시장은 제한된 시장을 두고 여러 형태의 유통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'제로섬(zero-sum)' 특성을 지님.

□ 유통업분야의 갈등 구도는 대형유통업과 영세소매상 간의 이해충돌로 보이나,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

- 소비자들은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 접근성 또한 양호한 점포에 대한 수요를 지님.
- 사업자 부문에서는 대형유통업체, 영세소매상, 도매상·벤더 등 사이에 이해를 공유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공존하는,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
-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영세유통업자들 간의 갈등 축소를 위한 정책 시행의 압박을 받음.

□ 최근 정부는 대형유통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조정정책과 중소소매상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진흥·지원 정책을 병행

- 정부는 2010년 「유통산업발전법」과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법」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
  - 금년 초에는 이를 더욱 강화, 대형유통업체의 규제우회의 여지를 줄이는 동시에 영업시간제한제도를 도입
- 중소소매상 지원정책으로는 납품체계 효율화를 위한 중소기업물류센터 건립, 동네슈퍼의 스마트화를 위한 '나들가게' 지원정책, 전통시장 지원, 영세소매상들에 대한 교육·컨설팅 사업, 체인화 사업, 유통정보화 사업 등이 있음.
  - 일부 지원정책은 제3의 시장참여자의 반발을 야기, 난관에 부딪치기도 함.

□ 그러나 사업조정정책과 지원정책의 정책효과는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

- 사업조정정책은 경쟁력이 높은 대형유통업체 및 관련 점포의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체를 보호(고용 유지)하며, 이는 소매업분야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효과를 지님.
- 반대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(생산성 향상)를 지님.

□ 유통정책의 기본방향은 사업자간의 이해 조정이라는 측면보다는 소비자 이익 및 선택권의 보장, 그리고 이를 통한 배분적 효율성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.

- 정부는 중소기업의 시장상황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함.
  - 예를 들면, 시장 및 경영정보의 투명화, 금융여건의 개선, 새로운 유통기법·조직의 활성화 보장 등
- 영세유통업에 대한 지원도 영세유통업자들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응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.
  - 또한 유통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타 다양한 사회정책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임.